

“지역 대표 노사상생 기업됐으면...”

기아차 ‘무분규 타결’ 지역사회·경제계 환영

“기아차 노사의 이번 무분규 타결이 100년 노사상생 기업으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20년 만에 분규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 지역 사회와 경제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또 2일 실시되는 기아차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노사화합의 정신이 반영돼 좋은 결과로 매듭지어지길 기대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기아차가 노사평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안정적 모

습을 보여준 데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기아차가 50만대 생산 능력에 걸맞은 활발한 생산활동을 유지하고, 앞으로 개발되는 기아차 신차가 광주공장에서 생산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강 시장은 또 “기업 유지와 투자 유치 활동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노사 평화가 정착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상공회의소 전영복 상임부회장은 “기아차 노조가 20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고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것에 대해 광주·전남 모든 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타임오프 협상을 남겨놓은 다른 사업장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기아차 협력회 광주분회 양진석(호원 대표이사) 회장은 “20년 연속 파업을 했던 기아차가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것은 살맛나는 일로 협력업체들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분규 없는 사업장으

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회장은 “2일 실시하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한다는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이상결 본부장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역 경제에 건전한 노사협력 풍토를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달 4일 국감 시작 여야 합의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부터 20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회동을 갖고 국정감사를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당초 추석연휴 직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달 3일로 연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국정감사 직후인 다음달 25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며 26~27일에는 국회 고심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아차 수출 ‘탄력’

기아차 노사가 20년만에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광주공장의 50만대 재편사업 등 생산과 판매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1일 오후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소울과 봉고 등을 실은 트레일러가 목포항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행안부 지자체 본청·의회 청사 면적 상한 적용 광주·전남 12곳 ‘비만청사’ 어찌나

임대·주민 편의시설 전환 안하면 교부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면적 기준을 훨씬 초과해 청사를 지은 것으로 드러난 광주·전남 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무시한 ‘비만 청사’ 건립으로 인한 비난 여론에 휩싸일까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개정된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사 면적기준을 훨씬 초과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3곳과 지방의회 9곳을 공개했다. 이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신축청사의 호화·대형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지방자치단체 본청, 지방의회 청사 면적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지난달 5일 시행에 들어갔다.

광역시도 단위의 경우 전남도는 면적 기준보다 57.2%를 초과했고, 광주시도 31.7%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여수시가 면적기준보다 5.4%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도 비슷하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면적기준보다 무려 135.6%를 초과한 ‘비만’청사인 것으로 드러났고 동구의회(87.0%), 광양시의회(88.3%), 전남도의회(45.3%), 여수시의회(40.4%), 화순군의회(41.4%), 함평군의회(28.8%), 영암군의회(27.7%) 등 9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행안부는 청사 기준면적을 넘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청사 초과면적을 1년 안에 공사·공단 등에 임대하거나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경우 행여 열악한 재정 현령에 ‘비만’청사 건립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까 고심하는 눈치다. 일부에서는 확연적 기준이라며 불만 표정이다.

전남도는 전체 면적(본청 6만 4782㎡)의 경우 개정안이 규정된 면적(4만 8967㎡)을 초과했지만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은 공무원 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비좁아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인 타 시·도와 연계, 현실에 맞게 시행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빙고골프장 재정운영 ‘빨간불’

수익률 목표치 80% ... 노인건강타운 지원금도 낮춰야

노인전문 복합문화시설인 광주시 남구 빙고노인건강타운(이하 건강타운)의 운영비를 보조해줘야 하는 광주도시공사 빙고골프장의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1일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 4월 개장 이후 5개월 동안 수익은 18억원으로 예상치의 80~90%에 불과, 목표수익인 36억원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빙고골프장의 재정 적자는 지역

내 골프장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운영 수익이 예상 외로 저조하자 광주시도시공사는 신규 수익 모델 창출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건강타운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을 기존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낮춰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타운은 1년 운영예산 63억원 중 33억원과 20억원씩을 각각 광주시와 빙고골프장에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자체수익은 1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최근 이 같은 건강타운의 열악한 수익구조와 관련 “건강타운의 운영비율 시비로 계속 지출하는 것이 맞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양심 있으면 좀 비껴가다오

광주시민프로축구단, 2차 시민주 공모

30일까지 光銀지점서

올해말 창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제2차 시민주 공모가 시작됐다.

광주시는 1일, 지난 1차 시민주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과 기업,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제2차 시민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주 청약은 지난 1차 때와 같이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접수하며, 인터넷(www.kjbbank.com)으로도 청약할 수 있다. 주주가 되면 내년 개막전 무료입장, 시즌 홈경기 50%할인, 제휴업체

물품할인 구매 등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각종 정보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차 시민주 청약에는 생활체육인, 자원봉사단체 등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10억5500만원을 청약,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차 시민주 청약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광주시민프로축구단 ‘1시민 1주 갖기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선벨트 남중권 9개 시·군 ‘행정협의체’ 조만간 출범

광양과 경남 진주 등 남해안 선벨트를 형성하는 남중권 9개 시·군을 회원으로 하는 행정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남중권 지자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광양, 여수, 순천, 고흥, 보성,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남중권 9개 시·군 관계 공무원 회의가 2일 오후 2시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광양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주관,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시장·군수 간

담회에서 논의됐던 협의체 결성을 위한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가장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발전협의회’ 출범을 위한 ‘주비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실무협의회의에서는 발전협의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협의회 제반 운영사항 규약 마련, 예산확보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 절차를 거쳐 발전협의회는 오는 11월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법령안 입법예고

국립중앙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제11조(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에 관하여 개정하는 것

제11조(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은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제12조(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개정하는 것

제12조(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은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법

국립중앙도서관법 제13조(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하여 개정하는 것

제13조(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